



현안

외국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오유빈*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하였고, 9월 12일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7,390억 달러(약 926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 확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함. 따라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I. 시작하며

-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¹⁾이 정식 통과됨. 「IRA」는 단순한 경제 관련 법률이 아니고 기후변화, 의료보전 및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으로 알려짐.²⁾ 특히 기후변화 정책과 전기차(이하 EV)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미국 정부. 2022.9.16. 인용: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7hr5376enr/uslm/BILLS-117hr5376enr.xml>

2 Quartz. 2022.9.16. 인용: <https://qz.com/emails/daily-brief/1849421975/bidens-signature-bill-becomes-law/>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영미 담당) ☎ 02-6788-4067



-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은 과도한 지출 규모에 대한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 이 법안의 재원 규모를 축소하고 수정하여 새로 나온 법이 「IRA」임.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³⁾는 총 7,390억⁴⁾ 달러 규모의 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EV 보급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부자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 법임.
- 「IRA」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중이 큰 법으로 미국 일부 언론 및 관계자들은 동 법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IRA」가 통과되기 전부터 국내 EV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음.
- 이 보고서에서는 「IRA」의 주요 내용 중 EV, 배터리 부문 및 기후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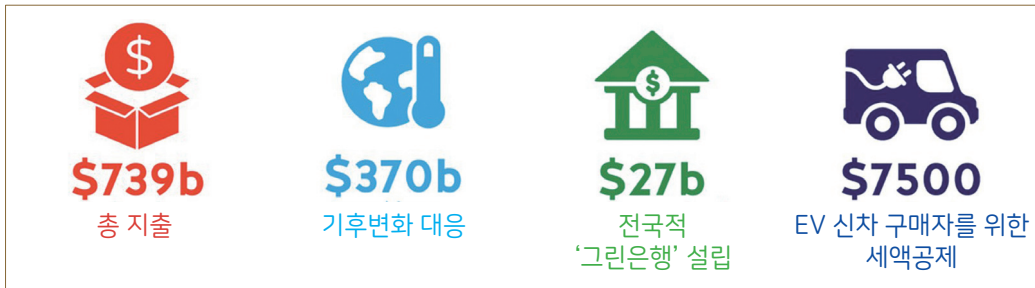
- 「IRA」는 EV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의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 공정한 세금제도가 정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IR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의 4가지임.⁵⁾
 -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조(Create Clean Energy jobs)
 - 공정한 조세법 구축(Make the Tax Code Fairer)
 - 미국 제조업의 회복(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 의료보건 비용절감(Lower Health Care costs)

3 CNN. (2022.8.17). Biden Signs Inflation Reduction into Law.

4 일부 자료에서는 7,400억 달러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임.

5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19/fact-sheet-the-inflation-reduction-act-supports-workers-and-families/>

「IRA」의 항목별 지출 규모



주: 그린은행: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을 위한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은행

자료: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2022.9.16. 인용: <https://www.ussc.edu.au/analysis/by-the-numbers-why-new-bill-is-the-most-important-climate-action-in-us-history>

-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후 백악관은 「IR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됨.
 - 「IRA」는 처방 의약품 가격과 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임.
 -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전역에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처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국가 적자 규모를 감축시키고 최상위 부자들과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함.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됨.
- 미국 민주당은 「IRA」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 감축시켜 미국의 제조업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⁶⁾
-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월 12일, 북미산 EV 상대 세액공제 조항이 들어간 「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백악관에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 사무실(White House Office on Clean Energy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을 설치하는 것으로 「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6 민주당. 2022.9.16. 인용: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조항 등의 시행과 관련한 정책 결정 절차를 조정하도록 할 예정임.⁷⁾

III. 부문별 주요 내용

1. EV 및 배터리

- EV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EV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승용차는 55,000달러, SUV와 픽업,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로 제한함.
 - 또한 가계 연간소득이 15만 달러(부부합산 30만 달러)가 넘는 경우 EV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함.
-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미국산 EV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여 EV 관련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법률 조항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국가(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사용한 EV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40% 이상이⁸⁾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⁹⁾
 - EV에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절반(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북미(캐나다 포함)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음.

7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9/12/executive-order-on-the-implementation-of-the-energy-and-infrastructure-provisions-of-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8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 비율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9 CRS. (2022.8.24). Clean Vehicle Tax Credi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 기후변화 및 에너지¹⁰⁾

-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EV와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 및 보조금은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으로도 볼 수 있음.¹¹⁾
- 현재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에 있어 두 나라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협력 제안을 거절해옴.
 - 이러한 상황에서 「IRA」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처 전략의 방향이 수정됨.
 - 미국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EV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과 경쟁함으로써 환경보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함.
- 「IRA」는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50년까지 최대 1.9조 달러의 기후변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
 - 탄소 배출량 감소, 제조업의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 및 친환경적 조치 등을 위해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됨.
- 기후변화 대응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EV 구매, 주택 개조 등을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IRA」에 포함됨.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과 규모는 다음과 같음.¹²⁾

주요 내용	세부사항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열펌프 등의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 시 14,000달러의 직접적인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태양열 설치 세액공제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30% 세액공제(약 740만 가구)
EV 구매 세액공제	신차는 최대 7,500달러까지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10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15/by-the-numbers-the-inflation-reduction-act/>

11 BBC. (2022.8.17). Biden Signs climate, Tax and Health Bill into Law.

12 PBS. (2022.8.17). W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Does for Green Energy.

- 전체 금액 중 3,75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에 쓰일 예정이며, 이는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투입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임.
 - 이 법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약 40%에서 최대 44%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함.
 -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EV 구매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선 등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일반 가정은 물론 사업체에도 2022년부터 2032년 사이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¹³⁾ 일반 가정에서 온수기,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¹⁴⁾

IV.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국의 「IRA」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호재이나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관련에 있어서는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최대 EV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북미에 생산거점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미 생산거점을 확보해 온 우리나라의 일부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는 예측이 나옴. 그러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I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원자재 비율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반면,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EV에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비상이 걸림.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그룹의 EV 전량이 국내에서 생산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법안이 서명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는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13 PV-Magazine. 2022. 9.16. 인용: <https://pv-magazine-usa.com/2022/08/12/whats-in-the-inflation-reduction-act-for-the-solar-industry/>

14 CBS News. (2022.9.13). Biden's Inflation Law Offers Up to \$14,000 for Home Upgrades, Here's how to Qualify.

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정부에서 파견단을 보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해당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함.

-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일부 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투자를 하면 「IRA」를 통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여 주 경제 활성화까지도 노리고 있음.
- 또한,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의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 친환경 정책의 성과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열 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구매 시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혜택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V. 맺으며

- 최근 「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후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권력서열 1~3위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모여 「IRA」 입법 기념행사까지 진행하였고¹⁵⁾, 11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IRA」가 FTA 및 WTO 등의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고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협력해 WTO 제소 등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힘¹⁶⁾. 우리 산업에 있어 태양광 분야는 긍정적, 배터리 업계는 신중한 입장, 자동차 업계는 악재로 판단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IRA」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중국의 반응과 향후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5 백악관. (2022.9.13).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13/remarks-by-president-biden-on-the-passage-of-h-r-5376-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16 Korea Times. (2022.9.13). 'Inflation Reduction Act is in Clear Violation of KORUS FTA'.

현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022-18호(통권 제44호 2022. 9. 20.)
-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2022-17호(통권 제43호 2022. 9. 6.)
-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2022-16호(통권 제42호 2022. 8. 25.)
-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2022-15호(통권 제41호 2022. 8. 11.)
-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2022-14호(통권 제40호 2022. 7. 28.)
- 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22-13호(통권 제39호 2022. 7. 14.)
-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022-12호(통권 제38호 2022. 6. 23.)
- 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책을 중심으로
2022-11호(통권 제37호 2022. 6. 9.)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2022-10호(통권 제36호 2022. 5. 26.)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2-9호(통권 제35호 2022. 5. 12.)
-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2022-8호(통권 제34호 2022. 4. 28.)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2022-2호(통권 제28호 2022. 1. 25.)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2-1호(통권 제27호 2022. 1. 11.)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2021-24호(통권 제26호 2021. 12. 28.)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2021-23호(통권 제25호 2021. 12. 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2021-22호(통권 제24호 2021. 11. 23.)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2021-21호(통권 제23호 2021. 11. 9.)
- 일본의 스마트농업
2021-20호(통권 제22호 2021. 10. 26.)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
- 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2021-19호(통권 제21호 2021. 10. 12.)